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입법절차 본격 돌입

5일 행안위 상정 9일 공청회 열릴듯

이번달 본회의 통과 목표 '속전속결'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 관련기사 7·8·9면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오는 5일 열리는 행정안전위

원회(위원장 신정훈) 전체회의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충남대전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대구경북통합특별법)’과 함께 상정된다. 이들 3개의 법안들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지난 30일 밤이됐고, 같은 날 대구경북통합특별법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을 비롯한 24명의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행안위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들의 행정통합을 담은 이들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위원장 정준생)에 넘길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양부남 의원(광주시당위원장, 서구을)은 “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라도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특례조항에 추가로 담거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오는 12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쳐 설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목표”라며 “그래야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와

도 오는 2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충남대전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상우 대전시장 등은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충남·대전 의원들은 이와 달리 광역의회 동의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나주시 뉴나주시티호텔에서 열린 제6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특별법 발의 후 첫 회의

핵심 특례사항 반영되도록 민·관 공동 대응키로

발의안 주요 내용 공유·향후 추진 일정 등 논의

전남도와 광주시는 2일 나주시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제6차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어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두 시·도 공동위원장, 추진협의체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전남도와 광주시를 하나의 통합특별법으로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특

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 조문(375개 특례)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를 비전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담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별법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특별법 통과 시기까지 전남·광주의 핵심 특례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민·관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발의된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인데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속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통합’을 빼고 ‘전남광주특별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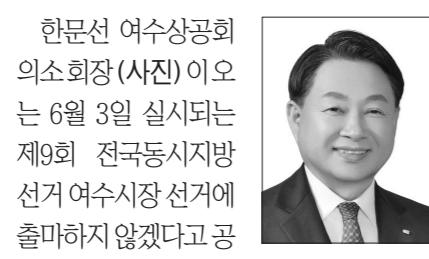
또한 “시군 공청회를 다녀보니 시도민들의 큰 기대와, 지역과 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정부가 약속한 4년이 지나도 매년 3조 원 규모의 재정이 특별법에 오도록 재정 분야 인센티브 특례 반영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선언을 넘어 입법과정에 들어섰다. 앞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조정을 잘 대응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유품, 의과대학 정원 최대 반영 등을 위해 추진협의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원팀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길을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추진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
여수시장 선거 불출마 선언



한문선 여수상공회 회장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문선 회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여수시장 후보로 나서 달라는 시민의 요청이 있었고 자천타천 거론되기도 했으나 지역 경제계의 일원으로서 현재의 입장은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전남 동부권의 핵심인 여수가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 선거 출마는 경제계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제인으로서 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할 일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다짐 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전남도, 유기농 중심 저탄소 친환경농업 집중

생산 기반 구축·인증품목 다양화 등 47개 사업 1601억 투입

‘유기농업 1번지’ 전남도가 2030년까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목표를 정한 정부 기초에 맞춰 47개 사업에 1601억원(자부담 204억원 포함)을 들여 유기농 중심 저탄소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농업 주요 정책 방향을 안정적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인증면적 증가세 유지, 과수·채소 등 인증품목 다양화, 선제적 판로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인증 품 안전성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한다.

분야별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83억원 등 11개 사업에 985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농가의 경영 안정과 과수·채소 등 인증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적불제 229억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80억원, 인증비 지원 105억원,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25억원 등 8개 사업에 510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을 기공·체험·관광·수출까지 아우르는 농촌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해남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2024~2029년) 180억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8억원 등 21개 사업에 58억원을 투입한다.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임산부

가 육성 18억원 등 5개 사업에 48억원을 투입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시기별 출하량을 예측, 선제적 유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관리시스템 구축,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판매 시범사업 등의 신규사업도 펼친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유기농 중심 저탄소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주요 품목(40개 이내)에 대한 시기별 출하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 선제적 유통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의 50%인 3만 5704㏊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15년 만에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1면 ‘3족 클러스터’서 계속

광주권은 인재와 기술의 중심이다.

전남·조선대·목포대·순천대 등 17개 대학에서 연간 3만1천 명의 반도체 관련

인재가 배출되고, 한국에너지공대와 광주 과학기술원의 Aram 스쿨도 구축돼 있다.

광주 공공청사 이전 부지 약 10만 평에는 ‘첨단 응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해 기업·대학 공동 연구와 테스트베드 기능을 집적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장성 첨단산업에는 반도체 첨단 페키징 클러스터를 구축해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생태계를 완성한다.

전남 서부권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인

도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당시인 2022년 9월에는 호남 5곳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이듬해 3월까지 활동한 이력도 있다.

배우자는 광주 동구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진우 의원이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및 6인의 감사위원 등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남구 감사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 및 최승필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년까지 태양광 5.4GW, 2035년까지 해상 풍력 12.1GW 등 총 17.5GW 규모의 발전 설비가 확충된다. 통합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확대도 가능하다. 무안군제공은 반도체 항공물류 거점으로 활용된다.

전남 동부권은 기존 산업 기반을 반도체로 확장한다. 석유화학·철강 중심의 소부장 기업을 반도체 분야로 전환해 소재·부품·장비부터 펩까지 한 권역에서 완결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여수·순천·광양만권 120만평 규모의 RE100 미래첨단산업 복합 콤플렉스에 반도체 산업이 더해지면, 퍼지컬 AI와 로봇 산업으로까지 확장되는 미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은 물과 전기, 인재와 기술, 소부장과 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준비된 지역”이라며 “반도체 3족 클러스터로 대한민국 산업의 물길을 바꾸고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